

#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④	②	①	②	③	④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②	③	④	③	③	④	①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3	재무이론	3
정책이론	5	행정환류	-
조직이론	4	지방자치론	2
인사이론	3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5	생소한 문제	4	100점 방지	1
------	----	--------	---	---------	---



실질적인 만점: 95점  
 고득점: 80점 이상  
 분발대상: 60점 이하

▶ 총평

일단 이번 국가직9급 행정학은 절대적인 고득점자는 거의 없는 시험이고 조정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니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고득점은 80점 내외 정도입니다.

해설 강의에서 매년 그랬던 것처럼 기출문제(「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와 작년 기출문제)와 이번 시험문제 일일이 비교해줍니다. 15문제는 역대 모든 기출문제도 아닌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와 작년 기출문제의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직접 하나하나 비교해줍니다.

몇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갑자기 엉뚱한 결론내리고 공부방향 엉뚱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기본서로 철저히 이해해야 고득점할 수 있다고 엉뚱한 결론 내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걸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이 행정학 딱 1과목일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험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출문제의 결론만 가지고 15문제 다 맞춰서 75점+a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5문제 중에 찍어도 1문제 이상은 맞으니까요. 기출문제로 그 15문제를 철저히 대비하신 분들은 무난히 80점 이상 맞았을 것이고, 유례없는 엄청난 조정점수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비가능했던 1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들에게는 사실 5문제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본 것을 소거하여 정답률 5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문제는 8번, 10번, 13번, 15번, 20번이고 문제해결 방법 및 대비 요령을 TIP에 적어 놔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은 부족하고 5과목이나 공부해야 하고 사람은 계속 까먹습니다. 따라서 꼭 이러한 합격 메커니즘을 명심 또 명심해야 다음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몇 개 때문에 절대 엉뚱한 결론 내리지 말고 해설 강의 보면서 제대로 공부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중

문 1.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배경이다.
-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암기용 해설>

-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배경이다.
- ▶ 1930년대 뉴딜정책: 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배경
-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 정치행정이원론적 관점
-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 ▶ 애플비: 정치행정이원론 주장

<이해용 해설>

- ① (○) 윌슨(W.Wilson)은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 ② (×) 정치행정이원론은 19C말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배경이다.
- ③ (×) 19C말 **과학적 관리론과 윌슨의 행정개혁운동(진보주의 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적 관점이다.
- ④ (×) 정치행정이원론을 대표하는 윌슨 등은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애플비(Appleby)**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38번(2015 경찰간부)]

윌슨(W.Wilson)이 쓴 1887년 논문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ㄱ.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를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 ▶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이해용 해설>

- ① (○), ② (○) 신엘리트론 관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이 정책과정에서 논의되고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기존 질서의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 ③ (○)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을 방해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 ④ (X)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사이먼(Simon)의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정책의제설정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447번(2014 국가9급)]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 B. 체제이론   |
| C. 다원주의론                | D. 무의사결정론 |

- ㄱ.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 ㄴ.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암기용 해설>

-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 ▶ 우리나라의 자치권: 자치사법권은 없음
-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 ▶ 자치입법권: 지방의회의 조례, 단체장의 규칙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자치권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행정구역 ⇨ 자치권 없음

<이해용 해설>

- ① (X) 우리나라는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X)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 ④ (X)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이 없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733번(2010 국회9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729번(2015 교행9급)]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767번(2007 충남9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②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1770번(2017 국가9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하

문 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 ① 직무조사
- ② 직무분석
- ③ 직무평가
- ④ 정급

<암기용 해설>

③ 직무평가: 직무의 곤란성·책임성에 따른 구분

<이해용 해설>

③ 직위분류제의 수립을 위해 직무의 곤란성(난이도)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직무평가이다. 직무의 곤란성(난이도)과 책임성은 직무별 보수를 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를 위해 서열법, 분류법, 점수비교법, 요소비교법 등이 활용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049번(2015 국가9급)]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기출에강한행정학 1054번(2018 서울9급, 2016 국가9급)]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A 서열법(job ranking)  | B 분류법(classification)      |
| C 점수법(point method) |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상

문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 ① 만족모형
- ② 점증모형
- ③ 최적모형
- ④ 혼합탐사모형

<Tip>

이 정도 사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응용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관식이 아니니까요! 만족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혼합탐사모형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가지 모형 중에 의사결정 과정을 둘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혼합탐사모형 밖에 없습니다.

<암기용 해설>

④ 혼합탐사모형: 근본적 결정 + 세부적 결정

<이해용 해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의사결정 과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는 모형은 혼합모형(혼합탐사모형)이다. 근본적 결정에서는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되 사례처럼 결과예측은 개략적으로만 한다. 그리고 세부적 결정에서는 개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내에서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539번(2014 국회8급)]

다음 중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출에강한행정학 539번 관련틀린선지(2007 서울7급)]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혼합탐사모형에서 점증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말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539번 관련틀린선지(2012 국가7급)]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에치오니(A.W.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략적으로 한다.

[100점 방지용] 중요도 없음, 난이도 상

문 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Tip>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국가재정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출제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지 않을 아주 지엽적인 규정이고, 실전에서도 정답을 고르는 게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규정까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규정을 반복할 수 없어 점수가 떨어지니 죄다 찾아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매번 출제되는 규정을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 ▶ **배정**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예산집행지침: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이해용 해설>

- ① (○)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배정**이라고 한다. 예산 **재배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 부서의 재무관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④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 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라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규정이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 ②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Tip>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어려운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강의에서 알려준 것을 까먹었더라도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신뢰성 - 충분조건X”을 정답으로 골라내는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해 부족을 탓하면 안 되고 기출문제 회독수 부족을 탓해야 합니다.

<암기용 해설>

-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 ▶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충분조건X)**

<이해용 해설>

- ① (○), ③ (×) 신뢰성은 평가의 일관성을 말하고, 타당성은 평가의 정확성을 말한다. 부정확한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면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렇게 신뢰성이 있다고 항상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 같은 것을 평가하는 데 평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계속 바뀌면 정확성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지면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 제 1종 오류 또는 제2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139번(2007 서울7급)]

- 공무원 선발시험의 효용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 ④ 시험의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Tip>

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그동안 출제하지 않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의 지엽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비 요령은 8번 문제의 TIP과 같고, 8번 문제와 달리 실전에서 정답을 고르는 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해설 강의 참고).

<암기용 해설>

-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겸임 대상: 일반직 공무원  
겸임 기간: 2년 이내
-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전직 조건: 원칙적으로 전직시험, 예외적으로 면제
-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 강임된 공무원의 봉급: 강임 이전 계급의 봉급 지급

<이해용 해설>

- ① (X) 겸임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겸임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다(필요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 ② (X) 전직은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 ④ (X)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문 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Tip>

선지 ④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매번 출제됐던 선지 ①, ②, ③을 소개하여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이미 발생한 후에 대한 것이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만 않았다면 선지 ④는 행정학 공부 안 해본 사람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선지입니다.

<암기용 해설>

-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 잠재적 갈등

<이해용 해설>

- ① (O)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부서 및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② (O) 전통적 관료제적 관점인 갈등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갈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③ (O)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의 양이 적은**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다양한 정보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④ (X)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은 아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갈등의 원인이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을 말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956번(2014 국회8급)]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갈등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948번(2013 국가9급)]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출에강한행정학 954번(2010 국회8급)]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과도한 정보전달

[기출문제] 중요도 A, 난이도 하

문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암기용 해설>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 ▶ 품목별 예산제도: 투입에 대한 통제 → 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함

<이해용 해설>

- ① (X) 품목별 예산제도는 구체적인 지출대상인 투입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투입에 대한 지출(세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 ②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위사업별로 업무량(업무단위)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 ③ (O)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을 통해 대안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려는 예산제도이다.
- ④ (O)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하위조직 단위인 의사결정단위를 설정하고, 의사결정단위별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여 상향식으로 요구하는 예산제도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1409번(2016 지방9급)]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Tip>

선지 ①, ④는 매번 기출 됐던 내용이니 바로 소거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지 ①에 대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한데 왜 옳은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 시험문제에서는 예외가 있더라도 “원칙”을 그냥 서술하면 항상 옳은 선지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예외를 포함”하거나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선지로 출제되어 왔어요. 시험에서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험문제의 출제 방식에 맞춰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것도 공부하고 싶으면 제발 기출문제 “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다른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 ②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수백 개씩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 자치사무는 순전히 지방정부의 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관련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순전히 중앙정부의 사무라는 것에 따라 상대적으로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용 해설>

-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 ▶ 보건소의 운영업무: 단체위임사무

<이해용 해설>

- ① (O)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률이 위임한 경우에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위임조례)이 가능하다.
- ② (X) 보건소의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의 예이고,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의 예이다.
- ③ (O) 단체위임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관련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전적인 통제하기보다는 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되 중앙정부가 사후적으로만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 ④ (O)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위임기관이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한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출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중

문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Tip>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시행 연도를 암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IMF 사태) 이후 신공공관리론적인 행정개혁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 기출문제 해설집」의 2019 서울9급 행정학 문제 해설에 있는 TIP의 '복붙'입니다.

<암기용 해설>

-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2000년에 처음 시행)

<이해용 해설>

- ① (○), ③ (○) 책임운영기관은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를 도입한 정부기관으로,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 ② (○)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는 어렵지만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에 성과관리를 도입한 정부기관이다.
- ④ (×)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책임운영기관이 도입되었다.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845번(2007 대전7급)]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③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기출에강한행정학 847번(2013 서울9급)]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출에강한행정학 848번(2005 국가7급)]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기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의 책임 여부와 정도는 성과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2019 기출문제해설집 95번(2019 서울9급)]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출문제] 중요도 B, 난이도 중

문 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Tip>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강의에서는 배우는 모형이지만 기출문제집에는 없으므로 잊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실전에서는 선지 ②를 건너뛰고 매번 출제됐던 선지 ③을 고르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 ▶ 정책승계

<이해용 해설>

- ③ (×) 정책목표는 변하지 않지만 정책수단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어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는 것은 정책승계이다. 정책유지는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정책승계와 같지만 정책수단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에강한행정학 661번(2014 사회복지9급, 2013 서울7급)]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는 정보가 정책선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 ② 정책유지
- ③ 정책승계



[생소한 문제] 중요도 C, 난이도 상

문 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Tip>

세계잉여금이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제가 강의 때마다 딱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만 챙겨두라고 한 것을 실천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원별 기출문제집(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에 있었던 선지 ㄷ은 소거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양은 많고 사람은 계속 까먹으니 제가 강의 및 교재, 그리고 이 해설에서도 출제가능성에 따라 전부 다 암기할지, 일부만 암기할지, 아예 버릴지 등 철저히 강약조절해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기 바랍니다.

<암기용 해설>

-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 ▶ 세계잉여금으로 항상 국채를 갚는 것은 아님 ⇨ 재정건전성 파악과 항상 관련되는 것은 아님
-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 ⇨ 기타채무상환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이해용 해설>

- ㄱ (○) 세계잉여금은 우리나라의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통해 계산한 실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에 대한 결산은 포함하지 않는 제도이다.
- ㄴ (×), ㄷ (×) 세계잉여금은 사용 순서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 ⇨ 기타채무상환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으로 정해져 있다. 앞 순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사용한다. 그래서 1순위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모두 사용하여 국채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국채 상환과 관련된 재정건전성 파악에 효과적이라고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